
〈신년 토론회〉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언론의 정파성



2023년 1월 12일(목) 14:3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자유인공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 토론회 개최 취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35년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 체제의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논쟁에서 학계, 직능단체, 시민단체까지 이 프레임으로 재단하며 전형적인 진영 논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은 한 국가의 정치체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극우 정치세력의 출현은 민주주의의 양극화가 한국만의 특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국정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양당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정치 권력의 집중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제도권 정치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잦아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언론의 정파성 주장을 한국 정치의 양극화라는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정한 정치체제의 지속은 정당, 언론, 시민사회 어느 한 쪽이 주도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언론의 정파성 또한 언론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구조와 체계에 갇힌 일종의 ‘잠금 효과’에서 기인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언론의 정파성을 규범적인 이론이 아닌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개혁을 병행할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진행 순서

○ 사회 :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 발표

- ‘적대 정치와 탈진실’ :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 5

- ‘정파성의 실험과 좌절’ : 홍성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17

○ 토론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유용민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이경원 SBS 팩트체크 전문기자

적대정치와 탈진실¹

김 만 권 (경희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가 다원주의와 결합한 시대, 서로 상이한 가치 간에 일어나는 불화의 정치는 사실상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화의 정치가 적대의 정치는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식민지 경험과 분단모순에서 비롯된 친일과 종북 논란에서 시작해 세대와 젠더, 능력주의적 공정성까지 상대방을 향한 단순한 적대를 넘어 혐오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적대의 정치는 가치와 입장의 차이를 적과 동지라는 집단의 대립으로 나누고,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에 필연적인 가치의 다양성 자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양성을 옹호하는 제도를 오히려 다양성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갈등의 조장과 적대의 부추김이 정보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탈진실 시대’의 현실은 공적 논의에서 필수적인 ‘사실’마저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적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합리적 사고를 무용하게 만드는 데 있다. 대신 적대는 정치를 정념으로 몰아가는 공포와 혐오와 쉽사리 손을 잡는다. 적대에서 비롯된 공포와 혐오는 더욱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본 발표문은 위에서 간략히 제시된 문제의식에 바탕을 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한다. “어떻게 적대 정치는 탈진실과 결합하는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한다. 첫째, 적대 정치란 무엇인가? 둘째, 적대 정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셋째, 왜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적대 정치에 친화적인가? 넷째, 적대 정치의 시대, 언론의 (새로운) 규범은 무엇일까?

¹ 이 발표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2-07, 「적대주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해법」(연구책임자: 김만권의 일부와, 김만권이 적대 정치와 관련하여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협회보」에 실은 칼럼을 발췌 및 확장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만약 본문의 인용이 필요한 경우 이 발표문의 제목으로 본문을 인용하지 마시고, 각주에 기재된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 적대정치란 무엇인가?

18세기 후반, 미국혁명과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민주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며 대다수 서구 국가들이 수용한 체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역시 받아들인 가장 기본적인 정치모델이 되었다. 20세기에 나타난 이런 정치적 대세를 따라 정치철학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모델이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런 민주주의의 모델은 ‘합의를 강조하는 합리성 모델’과 ‘갈등을 강조하는 비합리성 모델’이란 두 가지 흐름을 따라 구축되었다. 민주주의를 ‘적대’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적대주의 모델은 바로 갈등을 강조하는 비합리성 모델에 해당하며, 20세기에 구축된 민주주의 모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

이 적대주의 모델을 창시한 이는 나치의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였다.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행동이나 동기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정치적 구별이란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고 단언한다(Schmitt 1996, 26). 슈미트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적이란 누구일까? 슈미트는 “적이란 바로 타인, 이방인이며, 그 본질은 특히 강한 의미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한다. 슈미트는 이런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존적인 것이라 강조한다.

이런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적에 대한 규정은 정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정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소위 슈미트가 ‘인민’(people)이라고 부르는 집단의 ‘동질성’(homogeneity)에 있다는 것이다. 슈미트에 따르면 이런 동질성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천은 적의 존재이다. 결국 ‘우리’라는 집단의 동질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누가 적인지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Slagstad 1988, 111). 실제 슈미트는 “정치적 대립은 가장 강도 높고 극단적인 대립”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대립도 그것이 적과 동지의 편 가르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정치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Schmitt 1996, 27).

이런 적과 동지의 구분에 근거한 동질성의 형성은 두 번째 정치적 의미, 바로 ‘타자의 필연적 배제’와 맞물리게 된다. 이런 배제는 동질성을 갖는 집단의 자기보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근대 정치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국가 역시 이런 원칙 아래 작동하게 된다(Bockenforde 1998, 42). 문제는 이런 자기보존적인 타자의 배제가 가장 잘 작동하는 토양이 바로 낯선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특히 적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견고한 집단 형성을 위한 집단행동에 있어 핵심적 원천으로 작동한다(Evrigenis 2008, 1-2). 이런 점에서 ‘적과 동지’의 구분을 기반으로 둔 적대정치는 결코 ‘공포’(두려움)의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 더하여 슈미트는 이런 적대적 정치가 탈사실화 경향과 맞물릴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슈미트는 “정치적 적들에 대한 명료한 정치이론은 쉽게 정치현상이나 진실들을 자율적

규율이란 명분 아래 무도덕하고 비경제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으로써 쉽사리 반박할 수 있다”고 말한다(Schmitt 1996, 65-66).

결국 이런 슈미트의 적대모델은, 집단의 동질성이 이성적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통의 적에 맞서는 우리라는 감성에 기반해 있음을 보여준다. 더하여 이런 감성이 작동하는 토대는 적에 대한 공포이며, 이런 공포는 때로 진실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임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허버트 마르쿠제가 이런 슈미트의 적대적 민주주의를 두고 그 어떤 합리적인 목적도, 그 어떤 올바른 규범도, 모범이 될만한 프로그램도, 아름다운 이상도 없다고, 오로지 ‘집단으로서 생존’이라는 존재론적 상황만이 있을 뿐이라고 쓴다(Marcuse 1968, 30-31).

이런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개인들의 자기표현 중심적이며 인간성의 보호를 내세우는 자유주의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슈미트에게 자유주의적인 국가란 집단이 맞서야 할 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인간성을 내세우며 개인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하는 체제에 불과하다. 자유주의는 집단이 생존을 걸고 맞서야 적을 시장이나 정치에서 경쟁자라고 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놓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비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반정치적이기까지 하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외부의 적을 설정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국가의 존재 방식과 적과 동지의 구분에 근거하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적이나 다름이 없다(Dyzenhaus 1997, 38-39). 이런 점에서 적대주의 모델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되든 종래에는 자유주의라는 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적과 동지에 기반을 둔 존재론적 투쟁이 정치공동체 내부에서도 펼쳐진다는 점을, 슈미트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Schmitt 1996, 32). 슈미트가 스스로 밝히듯 이 내부의 대립에서 “약화하고 기생적이거나 희화화된 존재로까지 타락한 정치의 형태들이 나온다.”(Schmitt 1996, 30). 실존의 문제로서 ‘적대’는 ‘결국엔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생존 경쟁에서 국내 세력의 대립이 국외 세력의 대립을 압도하게 될 경우 그 투쟁이 내전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특정 정치공동체가 외부에서 적대할 수 있는 집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적대가 국가를 전복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슈미트는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벌어지는 헤게모니 투쟁이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두려워했다(Balakrishnan 2000, 263). 다시 말해 슈미트의 적대주의 민주주의 모델은, 동질성 확보를 통한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공동체 내에서 그 동질성 확보를 위한 투쟁이 오히려 정치공동체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위기 상황에서 정치공동체가 내부에서 허물어지는 것을 막고자 전쟁에 나설 가능성마저 열리게 된다.

슈미트가 나치의 정치철학자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적대주의 민주주의 모델은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란 격동과 함께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민주주의 모델이 ‘합의를 강조하는 이성적 모델’로 그 흐름이 바뀐

것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성적 민주주의 모델에는 ‘시민사회의 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모델과 ‘제도권 내의 합리적 판단’을 더 중요하게 보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모델이 있다. 이 두 모델 모두 갈등보다는 합의를 강조한다. 하버마스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공개적이며 열정적인 나치의 비판자였으며, 롤스는 역시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것의 핵심을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규정한 슈미트에 반대한다. 20세기 말 샹탈 무페가, 롤스와 하버마스를 비판하며 다시 갈등을 강조하는 경합적 모델을 제시할 때까지 이런 합리성 모델이 민주주의 이론의 중심을 차지했다(Mouffe, 1993).

하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볼 때, 합의를 강조하는 합리성 모델은 갈등을 강조하는 비합리성 모델보다 설득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합의 모델들 그 자체가 적대 모델에 대한 반박이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적대 모델은 민주주의 모델의 사실상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론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형성된 합의 모델은 실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적대에 맞서기 위한 대항적 산물이었을지도 모른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난무하고 있는 낯선 자들에 대한 배제와 공포, 더하여 이런 배제와 공포가 탈사실화와 맞물려 있는 상황은 현실에서 적대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 역시 이런 21세기 흐름과 분리되지 않았는데, 실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정치에선 입장이 상반되는 이들을 민주적으로 경쟁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적 적대 경향이 팽배한 상태다. 샹탈 무페가 지적하듯이 민주주의에서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통한 다른 세력 간의 경쟁은 정치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런 경쟁이 정치적 ‘적대’로 드러날 경우 정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Mouffe, 2005). 이는 정확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정치적 적대는 정치참여자들이 사실의 여부에 상관없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특히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의 의견만을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탈진실의 경향을 부추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슈미트는 적의 존재가 사적이 아니라 언제나 공적이며, 도덕적으로 악할 당위도, 미학적으로 추할 이유도, 경제적으로 해로울 필요도 없다고 말하지만, 정치적인 것이 실존적으로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라면 현실에서 적은 대개 악하고, 추하며, 해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적인 원한’의 대상으로 취급되기 쉽다.² 현실에서 우리가 적을 다루는 방식은 적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는 탈진실의 경향과 쉽사리 결합한다. 슈미트의 표현을 빌자면, ‘기생적이며 희화화된 정치’는 이런 탈진실의 경향과 어우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탈진실은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21세기 민주주의에 극단적으로 해로운 데, 사실이야말로 정치적 입장이 상이하고 갈등하는 집단 간에 공통적인 것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

² 이 절의 일부에는 김만권, “적대정치에 기생하는 대표자들” 「한겨레」(2022. 12.25)의 칼럼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이다. 서로 다른 사실 위에서는 유의미한 공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사실에 대한 수용이 구성원들 간 공통분모를 만들고 다른 해석과 비판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2022년 9월에 일어난 ‘바이든’과 ‘날리면’ 논란은 우리 사회가 탈진실 정치에 휩싸이며 이런 사실을 공유하는 일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적대가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³

이처럼 공통적인 것의 기반인 사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집단이 극단적 분열과 갈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례는 그리 멀리 있지 않은데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도 미국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내전을 경고하는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다.⁴

이처럼 정치적 적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한순간에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 실제 합의 중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비판하며 다시 갈등 모델을 복원하는 대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무페 역시 슈미트가 내세운 적대주의에 내재한 이런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무페가 내세운 경합 모델은 적대 모델을 만든 슈미트가 내내 강조한 “물리적 살해라는 현실적 가능성”, 바로 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무페는 갈등이라는 정치적 경합이 자유적 제도라고 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 강조한다(Schmitt 1996, 26; Mouffe 2005, 3, 32).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와 같은 탈진실의 적대 정치가 만들어내는 적대현상으로서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부족주의를 간략히 설명한다.

3. 적대정치의 구체적 현상들

1) 반지성주의

탈진실과 결합된 우리 시대 적대정치에서 가장 근본적인 현상은 ‘반지성주의’라 할 수 있다. 반지성주의는 호프스테터가 지적하듯이 “정신적 삶과 그것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와 의심이며, 또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언제나 얕보려는 경향”이다(호프스테터, 25). 이런 경향은 호프스테터가 분석하듯이 지성이 권력 엘리트를 옹호하는 반면 일반 대중의 삶과

³ 김만권, “필요한 대로만 보이고 들리는 세상” 『경향신문』(2022. 10.10)

⁴ “Most Trump voters see civil war as likely within a decade” in Washington post (2022.08.29.)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8/29/trump-voters-civil-war/>; “More than 40% of Americans think civil war likely within a decade,” in The Guardian (2022.08.30.)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aug/29/us-civil-war-fears-poll>

분리될 때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호프스테터, 70). 반지성주의는 단순히 전문가나 지식인에 대한 불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적대 정치에서 반지성주의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혹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태도다. 이런 반지성주의는 포퓰리즘과 정치적 부족주의에 내재해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포퓰리즘이나 정치적 부족화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정치적 적대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지구적 시장이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일상의 안정적 삶에 대한 불안은 반지성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 시민이 하나의 지성집단으로서 스스로 합리성을 발휘하는 과정은 단지 이성적 힘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정서적 신뢰와 연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일상에 대한 불안과 이에서 빚어지는 공포는 이런 신뢰와 연대를 만드는 정서적 토대를 파괴한다. 반지성주의에서 공통으로 나누어 갖는 감정은 나를 불안한 삶으로 밀어 넣는 모든 요소에 대한 공포와 이에서 비롯되는 반감 혹은 적대감이라 할 수 있다.

2) (우파) 포퓰리즘

이런 반지성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쉽게 결합하여 정치적 적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현상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은 부패한 엘리트와 권력을 빼앗긴 순수한 인민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해 있는 탓에 반지성주의가 자라나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특히 21세기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은, 기존의 정치체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던 아웃사이드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반목하고 있는 권력을 독점한 엘리트와 배제된 인민 사이에 여성·이주민·난민 등 외집단을 설정하고 권력 엘리트들이 이런 외집단을 배제된 인민들보다 더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적대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정치적 수사는 외집단이 우리 내집단을 갇아먹고 있는 기생충 같은 집단이라는 혐오와 더불어 이들로 인해 우리 정치문화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공포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런 우파 포퓰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며, 세대와 젠더 갈라치기가 큰 논란이 된 지난 대선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준석은 한 번도 당선 경력이 없는 원외 정치인으로서 기성정치인과 다르다는 ‘아웃사이드’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한편 이준석 현상의 중심에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적대라는 점에서 반지성주의가 있었고, (여성가족부 폐지 논리에서 보듯) 여성 혐오와 구별되지 않은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적 공격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 삼는 성향이 고스란히 존재했다. 이런 경향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로 드러났다.

3) 정치적 부족주의

(우파) 포퓰리즘이 특정 시기에 정치적 동원에 초점을 맞추는 적대 현상이라면, 정치적 부족주의는 일상에 고착화가 된 적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의 정치에서 공공연하게 시민집단 내에서 적과 동지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감정적이고 비논리적 정치적 수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부족주의가 정치에 자리 잡게 되면 정치의 탈사실화가 만연하게 되며 협의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더 이상 정치는 사실에 기반을 둔 정당한 공적 경쟁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사실과 관계없이 집단을 결속시키는 ‘배제본능’에 기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게임으로 전략한다.

특히 정치적 부족주의는 한 국가 내에서 지배구조가 흔들리며 정치가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경쟁하는 집단과의 관계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될 때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에이미 추아가 정확히 지적하듯, 배제 본능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는 ‘외부에서 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공포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존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외부 세력을 악마화하며 한 번 그 적이 확정되면 그 적을 파괴하려는 본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적대 정치와 그 궤를 정확히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점에서 우리와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배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완고한 불신이 부족주의의 기반을 이룬다.

식민지 경험, 분단과 개발독재 과정에서는 우리의 적이 외부에 명확히 존재하고 있었기에 우리 안의 정치적 부족주의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문제는 민주화 이후 내부의 이견이 허용되고, 이런 이견의 허용이 디지털 미디어와 맞물려 더욱 활발히 일어나며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족주의가 우리 정치에서 처음으로 전면으로 언급된 경우는 문파 현상이다. 이들은 정치인 문재인을 중심으로 ‘반기독권 정체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존 권력과 결탁했다고 보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적대적인 반지성적 경향을 드러냈다. 한편 이런 부족적 배제성향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 남성 세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세 현상의 관계

주의해야 할 점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정치적 경향이 만들어내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부족주의가 서로 온전히 구분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는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해 있는 곳이라면 광범위한 정치동원인 포퓰리즘이나 일상에서 패거리 짓기인 정치적 부족주의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는 포퓰리즘이나 정치적 부족주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늘 동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거대한 동원운동으로서 포퓰리즘은 일상의 정치적 부족주의로 변화할 수 있고, 일상의 정치적 부족주의는 경우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정치적 부족주의와 포퓰리즘이 함께 존재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포퓰리즘은 정치적으로 아웃사이드 출신의 지도자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면(트럼프의 사례), 정치적 양극화 속에 강화되는 정치적 부족주의는 주로 일반 지지자들의 배경에 따른 정치적 성향 특히 정당 성향과 함께 하는 경향이 있다. 반지성주의가 기본적으로 두 성향이 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과 정치적 부족주의가 겹치는 시기에 정치적 적대주의가 가장 고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2020년 미국 대선 전후가 이런 시기라 볼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기성 정치인을 불신하고 아웃사이드로서 트럼프를 무조건 신뢰하는 포퓰리즘의 성향과 공화당 중심의 백인 남성 지지자라는 정치적 부족주의 성향을 동시에 드러냈다.

4. 탈진실과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확산되는 경향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요소는 기술의 변화가 만든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급속한 확산이다. 과거에 중요한 정보의 흐름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이라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 의해 걸러졌다면, 유튜브와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지금은 이런 정보의 게이트 키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온라인은 시간과 물리적 공간에 제약되지 않는 장소성을 갖는다. 기술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과 생각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입장이 갈등하는 이들과 전투를 벌일 수도 있다. 실제 온라인은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씬 없는 회합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공간은 갈등이 단 1분도 멈추지 않는 곳으로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더하여 온라인은 별다른 정보 재생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보를 제약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동일 정보의 재생산은 링크 연결 혹은 복사 버튼의 클릭 한 번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생산의 비용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정보의 재생산에 물리적 비용이 드는 아날로그 매체와 견주어 볼 때 그 파급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셋째, 문제는 이런 파급력을 가진 온라인 정보들이 쉽사리 편향적이게 된다는 데 있다. 인공지능이 정보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는 한, 편향성을 가진 정보사용자들이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노출되면 더욱 편향적이 되는 경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정보사용자가 미디어의 추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면 이런 편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이재신 2022, 57).

넷째, 무엇보다 이런 정보의 편향성이 정보의 상업성과 만날 때, 탈진실의 경향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보의 게이트 키핑 능력을 갖춘 과거의 미디어는 공론장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사이에서 중개역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조회수가 중요한 ‘소셜’ 관계가 될수록, 더하여 그 조회수가 경제적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정보는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조회수와 이에 기반한 주목경제에서 정보의 가치는 갈등을 조장할수록 높아진다. 결국 이광석의 표현처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소셜’ 관계성이 지배하면서 사회는 ‘저들’에 대한 적대 의식들로 뭉친 정치 부족들로 수없이 파편화되고 쪼개지는 형국”에 이르게 된다. “사회가 소셜 관계로 대체될수록 조회수와 구독을 높이는 일이 곧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이광석 2022, 219).

소위 생계형 인플루언서들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혐오, 편견, 차별을 비롯해 극단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가운데 정치 유튜버들은 시선을 끌기 위해 “상징 폭력의 극적 희생양을 찾기 위해 몰두”한다. 이 가운데 정보에 대한 왜곡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욕먹는 것이 아무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되는 세계가 바로 디지털 미디어이기 때문이다(이광석 2022, 220). 이 가운데 디지털 공론장은 쇠퇴하며 그 자리를 돈이 되는 정보들이 메꾸어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광석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인간이 생존 그 자체에 매달리고 불평등이 크게 존재하는 불우한 현실에 처할수록, 타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이고 구조적 문제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불안감을 풀기 위해 ‘저들’을 증오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로 퇴각하도록 유혹한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를 증오와 혐오의 정치로 환원하는 우익 포퓰리즘 양상이라 할 수 있다.”(이광석 2022, 221)

디지털 미디어가 개인들의 생계형 산업이 될 때, 정치에서 탈진실은 일반화 경향을 띠게 된다. 결국 이런 탈진실 경향은 우리가 서론에서 규정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혹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태도’인 반지성주의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장소성 자체가 갈등유발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재생산에 비용이 들지 않기에 그 파급력이 폭발적이다. 셋째, 디지털 정보는 인공지능의 학습 알고리즘상 편향적일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을 갖고 있다. 넷째, 디지털 미디어가 조회 수에 입각한 주목 경제와 만날 때 탈진실적일 뿐만 아니라 갈등 유발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적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적대의 시대, 언론의 새로운 규범?⁵

2022년 8월,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3%가 10년 내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다 이렇게 많은 미국인이 내전을 걱정하게 된 것일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따르면 그 주된 원인은 미국 정당정치의 양극화에 있다. 특히 1990년대 공화당 지도부였던 뉴트 킹리치의 극단주의가 시작이었다. 킹리치는 민주당을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하도록 공화당원들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하원의장이 된 이후에는 아예 민주당과 ‘타협불가’를 방침으로 정했다.

킹리치 이후 극단주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전략가 칼 로브로 이어졌다. 로브는 공화당의 승리전략으로 유동층을 내려놓고 지지자 집단의 집결에 당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서 민주당 역시 공화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거부하면서 극단적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양극화는 미국정치를 유지해 오던 두 가지 규범을 무너뜨렸다. 우선 상대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가 사라졌다. 더하여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이후 미국정치에선 에이미 추아가 지적하는 ‘정치적 부족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부족의 시대에 정치는 경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되었다. ‘적대 정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적대 정치’는 ‘탈진실’ 경향과 결합했다. 앞서 보았듯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적을 제거하고 몰아내는 일’이다. 진실의 여부, 정보의 가치는 이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시엔엔(CNN) 같은 진보적 매체들을, 민주당 지지자는 폭스뉴스 시청자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적대적 ‘탈진실’ 경향은 당연히 ‘반지성주의’ 경향을 띠었다.

트럼프는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할 수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동안 매일 평균 21건, 총 30573건의 허위정보를 전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에게는 상관 없었다. 오히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 난입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우리 정치가 현재 당면한 문제는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극대화된 적대가 선거가 끝나고 8개월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안보정책부터 내부의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적대가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서 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라는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 역시 건설노조를 두고

⁵ 이 절은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칼럼, “적대의 시대, 언론의 역할”(가제, 발행예정)을 확장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며 적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축인 ‘노동’을 두고 ‘악하고’ ‘위험하며’ ‘해로운’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당정치에 상호협력의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경쟁하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호비난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는 외연의 확장보다는 각자의 지지층에게 매몰되어 양극화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가 탈진실 경향 속에 적대하는 부족으로 분열된 미국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정치가 규범을 잃고 양극화될수록 입장이 다른 이들은 서로 마주하지 않는다. 이때 등을 진 세력 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언론이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언론이 정파성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파성을 띠더라도 상호 관용과 이해, 신중한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입장이 갈등하는 이들을 공론장에서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이 정치가 잃어버린 규범을 놓지 않는다면 정치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탈진실’과 결합한 적대 정치의 시대, 언론의 새로운 규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 Balakrishnan, Gopal. (2000) *The Enemy: An Intellectual Portrait of Carl Schmitt*. New York: Verso.
- Böckenförde, Ernst-Wolfgang (1998)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A Key to Understanding Carl Schmitt's Constitutional Theory,” in *Law as Politics: Carl Schmitt's Critique of Liberalism*. Ed. David Dyzenhau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Dyzenhaus, David. (1997) *Legality and Legitimacy: Carl Schmitt, Hans Kelsen, and Hermann Heller in Weimar*. New York: Clarendon Press.
- Evrigenis, Ioannis D. (2008) *Fear of Enemies and Collective Action*.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dis, John B. (2016). *The Populist Explosion*. New York: Columbia Global Reports.
- Marcuse, Herbert. (1968) *Negations*. Boston: Beacon.
-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New York: Verso.
- . (2005) *On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 . (2018) *For a Left Populism* (London: Verso, 2018)
- Schmitt, Carl. (1996)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lagstad, Rune (1988) “Liberal Constitutionalism and Its Critics: Carl Schmitt and Max Weber,” i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Ed. Rune Slagstad Jon Els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준만. (2022) 『정치적 올바름: 한국의 문화전쟁』. 인물과 사상,

김만권. (2021 겨울)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으로서 ‘이준석 현상’” 『황해문화』.

에이미 추아. (2020) 『정치적 부족들』. 부키.

이재신. (2022)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다양성 그리고 편향』. 커뮤니케이션 북스.

이광석. (2022) 『디지털 폭식사회』. 인물과 사상사.

이준석. (2019) 『공정한 경쟁』. 나무 옆 의자.

공영방송 정파성의 맥락화 :
KBS <거리의 만찬>을 중심으로

홍성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2023. 1. 12.

2020년 2월 KBS시청자위원회의 풍경

◆ 시청자위원회 제2부 본회의

시청자센터장: 안녕하세요, 시청자센터장 이도경입니다. 지금부터 2월 정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승동 사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새로 임명된 부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라디오센터장을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사 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KBS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한 2년 가까이 돼서 전반기라고 생각하고 전반기를 기존 임원들, 뭐 일부 임원들은 전에 또 인사가 있었지만 몇 분 이렇게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를, KBS는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들이 많고 또 우리 뉴스나 콘텐츠가 더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국면이어서 어제 일부 임원 인사를 했습니다.

위 원 장: 이것은 이어서 우리 부사장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거리의 만찬」 건도 사실은 편성의 문제가 있지요. 1채널에서 2채널로 넘어가면서 사실 시청률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으니까 다음 시청자위원회 때 혹시 편성본부장이 관련된 데이터 한번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님.

KBS 시청자위원회 2020년 2월 회의록에서 발췌

KBS 전 부사장 및 시청자위원장의 정치권 직행

KBS 뉴스 Q ≡

21대 국회의원 선거
"물러나자마자 정당에 줄" ...정필모 전 KBS부사장 정치권행 비판

입력 2020.02.25 09:16
 수정 2020.02.25 07:53

코로나19 특집뉴스
‘행의 유일’ 2시간 연속 방송



연기사
 < 코로나19 여파, 코로나19 확진률 지속
 보낼 수 있나? >

다음기사
 범죄 전역 용역도 불렀다, 김주원 용역 >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불과 한 참여 전까지 KBS의 부사장을 지냈던 인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도 사퇴 이틀 만에 같은 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리의 만찬> 종영



홈 > 최신기사

김용민, '거리의 만찬' 자진하차... "제작원 점에서 다시 논의" (종합2보)

2020-02-06 18:36

3가 12 공유 댓글 21

'거리의 만찬' MC 교체 건으로 KBS 시청자위원회 특별 회의 소집
제작진 "시청자 의견 무감개 받아들여"...김용민 "제작진에 사의 표명"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여성의 시선으로 시사 이슈를 풀어내는 KBS 2TV 시사교양 '거리의 만찬' 차기 MC로 내정된 시사평론가 겸 방송인 김용민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시작도 전에 자진 하차했다.

'거리의 만찬' 제작진은 6일 입장을 내고 "김용민이 자진하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작진도 그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전날까지만 해도 오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MC 발탁 배경을 설명하겠다고 입장이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바꾼 셈이 됐다.

사회적 소수자, 여성과 연대하는 정파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거리의 만찬>은 그동안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었고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던 소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 1월 쌍용차 해고자들의 삶을 취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거리의 만찬>이 가진 '연대'와 '소통'의 가치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고통 받았던 지난 10년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며 보여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넘는 장기해고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심리적 압박이 크지만 힘겹게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중 진행자가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교체가 시종 개편에 의한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며 새로운 진행자가 <거리의 만찬>을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시청자들의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중 양희은 씨가 '잘렸다'고 밝힌 글을 확인했습니다.

제작진이 '해고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취지로 쌍용차지부를 섭외한 것에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잘려나간 자리'에 저희가 나가 해고의 부담함을 말할 때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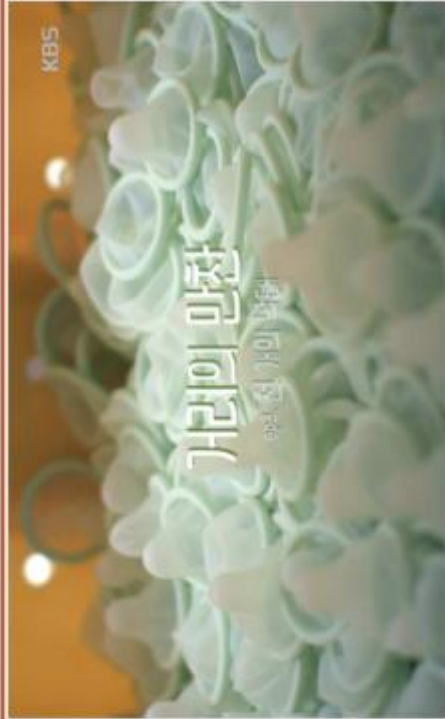
방금 시즌2의 진행자로 예정되었던 김용민 씨의 하차를 KBS가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리의 만찬>을 소중하게 여긴 시청자들의 문제제기를 KBS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즌1의 진행자들이 '잘렸다'는 주장에 대해 KBS의 책임 있는 답변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거리의 만찬>이 여성들과 소수자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방영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리의 만찬>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더욱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휴대폰 메모드 · 2020. 2. 6. · ☎

전체 크기 보기

<거리의 만찬>의 성취



<거리의 만찬>의 성취



몇 가지 의심들



친여 정책과의 동조성

방영일	회차	제목	내용
20190104	8	삶의 조건 2부 - 내일도 행복할 거야	소아원회의료는 희귀증증질환을 가진 어린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다. 아픈 아이와 긴병을 하는 엄마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소아원회의료팀에 대해 다룬다.
20190111	9	삶의 조건 세 번째 이야기 -내일도 행복할 거야 2부	소아원회의료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엄마들의 진솔한 이야기
20190301	15	바꿔야 산다	할 말 있는 소방관들을 직접 만나 소방관의 묵직한 국기직 진함이 국민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20190308	16	언론에 당해봤어?	우리 사회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 그 영향력은 권력기관에 견줄 만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지는 기사들은 정보 포화 상태를 만들었고, 그 사이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언론을 피해쳐 보는 시간을 가진다.

친여 정책과의 동조성

방영일	회차	제목	내용
20190705	32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난 5월 31일, 검찰 개혁의 첫 걸음으로 평가됐던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다. 2018년 12월 12일 발족하여 1년 6개월간 17개의 사건을 통해 검찰의 과오를 들여다 본 과거사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여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거사 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직접 만나 활동의 결과와 앞으로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0190816	36	다른 백년 1부	3.1운동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2019년,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백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평생 역사소셜 집필에 골몰해 온 조정래 작가와 한국으로 귀화한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키 유지 교수의 제언을 듣는다.
20190823	37	다른 백년 2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한국의 팽팽한 맞대응으로 식을 줄 모르는 한일 무역 전쟁.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 등 여러 이슈를 통해 한일 갈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2020105	54	서울에서 개성까지 택시요금 7만원	김지기 중단된 개성공단 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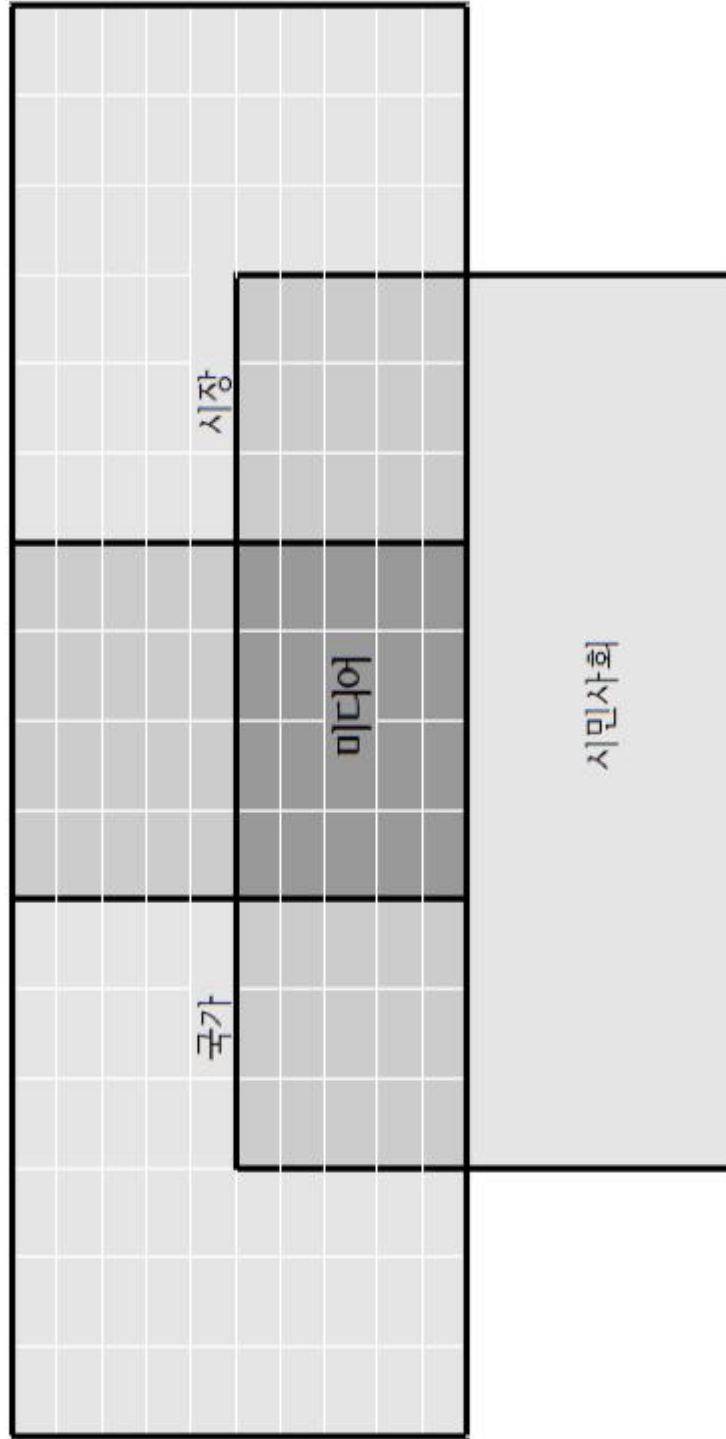
친여 정책과의 동조성



너무도 가까운 국회



사회구성체 속 미디어의 위치



<표 1.> 사회구성체 속 미디어의 위치

저널리즘 장의 동력

“저널리즘 장과 관련시켜 말하겠습니다. 기자들은 갖가지 정보들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도구와, 이 도구를 통한 일반 시민과 학자, 예술가, 작가 등 문화생산자들의 접근을 독점적으로 장악함에 따라, 즉 대량분배의 ‘공적 공간’까지 파고들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모임, 집단의 자격으로 정보를 광범위하게 배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맞추어맞치게 되는 것은 이 독과점입니다.) 비록 그들이 문화 생산의 장에서 열등하고 지배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들은 매우 특별한 형식의 지배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존재하고, 널리 알려져서 ‘공적 명성’(이것은 정치인들과 일부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목적입니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지적인 매력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로 (적어도 그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부 인정(認定)의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릴 수 있습니다. (비록 노련한 기자들일지라도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처럼-기자들 중 일부는 이 집단에 속하기를 열망합니다-때때로 지배할 수 있는 범주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들의 반지식민주주의의 경향을 설명해 줍니다.)”

P. Bourdieu(1996), <텔레비전에 대하여>, 현택수 역(1998), 동문선, 79-80쪽

두 가지 호명 혹은 두 가지 정파성

“사회구성체 있어서 지배적인 생산관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전체로서의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과정들의 상대적 자율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있어서 민중-민주적 호명들(popular-democratic interpellations)이 계급 호명들(class interpellations)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 즉 ‘중간 계급’들의 점증하는 사회적·정치적 비중은 동시에 민주적 투쟁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확장시켰고, 계급투쟁의 전반적인 영역 내에서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중요성을 높였다.”

E. Laclau(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New Left Books, p.135.

<거리의 만찬> 3인 진행자에 대한 주목

박미선은 파일럿부터 참여해 종영까지 <거리의 만찬>을 지켰다. 그가 85화번이라는 점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한국의 87 체제가 80년대 일부 수도권 대학을 다닌 남성들에 맞출되며 이들이 이른 나이에 학계, 정계, 시민운동, 기업 내부의 지배 세력으로 부상한 뒤 오랜 기간 주도권을 놓지 않아 후속 세대의 기회를 가로막고 가부장제의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은 지금, 그들과 동세대면서도 남성의 주변부에 머물거나 권력 다름에서 배제되었던 예능인 출신 여성이 시사 프로그램의 중심에 들어오며, <거리의 만찬>의 톤과 메너는 기존의 엄숙했던 저널리즘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저널리즘의 전통인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면서도 박미선은 이들을 계도·계몽하고 제한·대표하는 권위의 자리를 점하기보다는 늘 프로그램 안에 자신의 일상 경험을 풀어와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경청한다. 여성의 신체결정권(2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0-1회, 0-2회, 10회, 11회, 35회), 돌봄 노동(4회, 6회, 8회, 9회), 심리 건강(50회), 청소년(3회, 20회, 48회), 삶과 죽음(40회, 45회, 52회), 장애인 인권(1), 성소수자(24회), 성폭력(19회), 다문화 가정(51회), 젠트리피케이션(14회), 혐오 표현(23회, 49회) 등의 문제에서 박미선의 공감 능력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가 아니라, “나도 겪어서 공감하는데”이다. <거리의 만찬>에 출연한 일반인의 긴장을 달래고 더불어 그들의 증언을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는 박미선의 화법은 여러모로 경탄스럽다. 예컨대 극히 일부만 가져온다면 52화 존엄사 예피소드에선 부친의 사인을 암이라 말하며 간병 과정에서 흥석친과 김조광수 감독과의 개인적 인연을, 43화 임시 컨설턴트 편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 과정에서 기졌던 부모로서의 고민을, 24화 성소수자와 그 부모모임과 만나면서 흥석친과 김조광수 감독과의 개인적 인연을, 10회 하청노동과 산업 재해 문제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고 김용균과 동감이었음을 말한다. 그의 화법은 인터뷰이에게 공감과 연대를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취재원과 거리를 두는 기자들의 접근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여성 청취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회로예락에 일희일비하며 오랜 시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양희은 또한 60대 장년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관조하고 아우른다. 이들은 오늘의 주요한 삶의 화두가 관념화된 추상이나 정책 결정자나 고위 기업인의 손끝에 있다기보다는 대중의 일상과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거리 곳곳을 누비며 확인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탈탈하고 수더분한 이미지를 쌓아올린 40대 이지혜 또한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즐겁고 유쾌하게 시사 이슈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무지와 각성의 거리를 좁히는 데 일조한다.

홍성일 (2023), 미발표 논문에서 발췌.

<거리의 만찬>의 좌절

시사고양2국장: 「거리의 만찬」 MC 교체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중에 청취율이 높은 김용민을 선택했다거나 제작비 부담 때문에 황급해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장에서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릴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청취율이 높다는 것은 경쟁적으로 저희들은 한 요소로 판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한 적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선 MC 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시작은 경쟁력의 절대적인 하락이었고 프로그램의 존재를 고민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했고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고 누구든지 만난다는 모토로 시사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MC 교체가 하나였습니다. 진행자는 공감 능력이나 녹화 스케줄 확보나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과 통찰 등을 고려해서 이에 부합하는 인물로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김용민 씨의 경우 이미 KBS, MBC 등 지상파 라디오에서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사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 있는 진행자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래 전 발언이 문제이긴 하나 본인이 수차례 사과를 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일이라고 제작진은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은 명백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진행자를 선택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2020년 2월 회의록에서 발췌

공론장의 재구축과 정파성의 재정립

가령 공영방송의 위기라고 할 때, 그 위기를 단지 정권에의 종속, 시청자의 이탈, 광고시장의 축소 같은 표면적이고 파편화된 원인들의 나열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소통의 가치와 실천을 현실화하는 가장 중요한 실체로서 공영방송의 정치윤리적 위치와 역할이 문제화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윤리를 사유한다면 필연적으로 '진실'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하는 진실행위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진실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질문되지 않은 채, 언어 소통의 빈도수나 강도를 묘사하는 기능주의적 근면성만으로는 한 사회에서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믿는 지식에 스스로 결속하고 그것을 두려움 없이 말로 표명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일, 이것을 진실행위라 할 때 진실의 레짐은 진실행위가 사회적 방식으로 규범화되고 정치적 차원에서 활성화되며 순응적 혹은 대항적 주체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기제를 가리킨다.

김예란(2017), 진실의 레짐과 미디어, <방송문화연구> 제 29권 1호, 19-20쪽.



감사합니다.

 토론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토론 / 유용민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